



생명보다 포스코 이윤 걱정하는 노동부

‘노동자 생명 포기’ 포스코·노동부 규탄 ... “조사·대책 마련에 노동자 참여해야”

경북 포항 포스코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협착사고로 사망했다. 금속노조가 포스코의 잦은 중대재해에 대해 최정우 회장의 구속 처벌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0대 하청노동자인 재해자는 2월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다.

오전 9시 38분쯤 컨베이어에 철광석을 붓는 크레인(엔로더)이 갑자기 작동해 재해노동자는 작업 설비와 크레인 사이에 끼었다. 병원으로 옮긴 지 2시간도 안 돼 숨졌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에 따르면 중량물 취급 작업임에도 관리·감독해야 할 작업지휘자가 사고 당일 현장에 없었다.

사고 현장의 컨베이어벨트·엔로더 운전 업무와 컨베이어벨트 정비 보수 업무를 각기 다른 하청 업체에서 맡고 있었다. 복잡한 하청 구조로 업체 사이 업무 소통이 평소에 원활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



하청지회는 2월 16일 오전 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노동자 생명안전 포기 포스코, 기업편향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사고 진상규명과 포스코 전체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을 요구했다.

황우찬 노조 포항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포스코가 또 죽였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최정우 회장이 직접 나서 안전 최우선 경영을 약속했지만, 매번 말뿐이다”라며 “반복해서 벌어지는 포스코 산재 사망사고를 정부·노동부는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볼 참인가”라고 분노했다.

포스코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에서 원·하청 노동자 열여덟 명이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포항제철소에서 지난해 12월에만 집진기를 정비하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두 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3년 동안 포스코 18명 산재사망

황우찬 노조 포항지부장은 노동부 포항지청의 기업 감싸기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황 지부장은 “노동부는 포스코에서 중대재해가 터지면 마지못해 현장 감독에 들어갔다”라며 “시늉뿐인 감독 과정에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사건

을 왜곡·축소 해석 하는 등 노동자 사망보다 포스코 생산 차질을 더 안타까워했다” 라고 토로했다.

잇따른 중대재해로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포스코는 2020년 1조 1,000억 원을 현장 안전을 위해 쓰겠다고 발표했다. 최정우 회장은 올해 신년사 등에서 생산보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6대 중점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사측이 약속한 대로 포스코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현장 상황을 전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병대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지트분회 부분회장은 “중대재해가 터지자 포스코 원청이 이런저런 지원과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현장은

더 위험해졌다” 라며 안타까워했다.

손병대 부분회장은 설비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데 포스코가 시설 정비 업무 노동자를 계속 줄이고 있다고 증언했다. 안전분야 투자를 어디에 얼마만큼 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포스코는 노동자 감시 CCTV 설치를 늘리고, 위험한 설비나 법 위반 공정에 대한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등 현장 통제만 강화했다.

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기자회견에서 노동부에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체 공정·설비 안전보건진단 시행 ▲노동재해 근절 노·사·정 협의 테이블 구성과 근본대책 수립 등을 촉

구했다.

손병대 부분회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노동부는 사고 진상 규명 작업과 대책 마련에 현장 노동자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손 부분회장은 “노동부가 포스코 사측이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사고 원인 조사 참여를 거부했지만, 더는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 라며 “노동자들이 직접 포스코 노동재해를 없애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에이산업, 불법파견 처벌 피하러 폐업

지에이산업분회 천막농성 돌입 ... “경남도·사천시, 폐업 철회 대책 세우라”

한향공기 동체 부품표면 처리 업체 지에이산업이 불법파견 처벌을 회피하려고 폐업을 강행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는 폐업 철회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2월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지에이산업은 2018년 경영 효율화를 앞세우며 공정 대부분을 다섯 개 소사장업체로 외주화했다. 지에이산업은 2020년 3월 한 개 업체를 폐업하고 새로운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으며 금속노조 조합원만 고용 승계에서 제외하는 노조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 사측은 노동조합 투쟁으로 고용을 승계했지만, 2020년 9월까지 세 개의 소사장업체를 폐업하며 노동자 25명을 해고했다.

노조 지에이산업분회는 2020년 8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지에이산업을 불법파견으로 고소했다. 노동부는 기소의견으로 사측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측은 법률상 처분이 나기 전 일방 폐업 했다.

노조 지에이산업분회는 사측에 무급휴직 등 공장을 살리기 위한 교육책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사측은 지난 1월

31일 일방 폐업을 강행했다.

노조 지에이산업분회는 사내 천막농성과 출퇴근 선전전을 벌여왔다. 경남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테크노파크가 지에이산업의 건물과 설비는 물론 1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분회는 ▲폐업 실질 원인인 불법파견 즉각 처벌 ▲경남도와 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폐업 철회 행정 역할 ▲지에이산업 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안 수립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